

# “겨울왕국 온 것 같아요” 빙상장서 째통더위 이겨낸다

### 광주·전남 일주일째 폭염... 실내빙상장 피서 가족·학생·연인, 스케이팅 즐기며 더위 잊어

“영딩방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광주·전남에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오전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 실내빙상장. 빙상장은 때 이른 폭염을 잠시나마 피하려는 학생들과 연인,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저마다 안전모를 쓴 시민들은 불볕더위를 금세 잊은 채 얼음 위를 신나게 누볐다. 스케이팅하가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안전대를 붙잡고 총총걸음을 뒀거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능숙한 솜씨를 뽐내듯 빙상장 한 바퀴를 빠르게 누비는 시민들도 보였다. 빙판 중앙에서는 실내와 빙판 표면 사이 온도 차에 따른 흰 김도 이따금 피어올랐다. 전교생이 20여 명 되는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나와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마음껏 빙판 위를 누비며 더위를 식혔다. 한참을 정신없이 놀던 아이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제 춥다’며 몸을 떨던 떨다가도, 곧장 언제 그랬냐는 듯 빙상장으로 들어가 스케이팅을 즐겼다.

몇 걸음 못 가 영딩방아를 찍는 아이들은 씩씩하게 벌떡 일어나 앞으로 전진했다. 정수리부터 타고 흐르는 땀을 닦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노는 아이들 표정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학생들과 함께 달리던 선생님들도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가 된 듯 빙상장을 쉽게 돌아왔다. 권모(13)군은 “처음 들어왔을 때 겨울 왕국 같았다. 영딩방아를 많이 찍었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다. 너무 즐겁다”고 들뜬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채모(10)군은 “긴장도 되고 많이 떨렸지만 적음이 되다 보니 너무 재밌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도 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른 여름 휴가로 광주를 찾은 가족부터 ‘스케이팅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도 눈에 띄었다. 40대 여성 박모씨는 “남편 휴가에 맞춰 아이들도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고향인 광주를 찾았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 커플은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이색 실내 데이트를 고민하다 빙상장을 방문했다. 둘 다 10여 년 만에 스케이팅을 탄다. 손 잡고 함께 달리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며 멋쩍게 웃었다.



일주일째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오후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 실내빙상장에서 한이기가(아빠)의 부축을 받으며 스케이팅을 타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부터 무더위·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은 이날까지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다. /오권철 기자

##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 일당, 법정에 금융위 비인가 업체 2곳 비상장주식 거래 가담 16명 기소 “불법인 줄 몰랐다” 대다수는 전업주부... 벌금·징역형 구형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A(63)씨, B(60)씨와 직원 14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는 업체에서 일하며 1명당 최소 1억~최대 1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투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경력 단절 전업주부로서 생활비를 벌고자 비인가 금융투자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인가 금융투자영업 행위는 해당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제삼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금융감독기관에 적발됐다. 검사는 비인가 투자업체를 운영한 A씨와 B씨에게는 각기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와 거래액수에 따라 직원 14명에게는 벌금 100~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이들의 범행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단순히 거래 상대방 요청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을 뿐 과장 광고나 사기 행각은 없었다. 매매가도 거래 상대방과 상의하고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통상 정해진 값에 팔았다. 전체 매출의 1%를 서로 나눠가져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적다”고 주장했다. 이들 역시 대다수가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했을 뿐”, “불법인 줄 몰랐다”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법 지식에 무지해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11일 오전 열린다. /전민규 기자

## “의(義) 청소년 헌법센터 설립 추진”

### 김대중 전남교육감, 호남이 K-민주주의·K-교육의 뿌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전남에 가장 ‘아시아 의(義) 청소년 헌법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남형 작은학교 운영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전남교육청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 아시아 의(義) 청소년 헌법교육센터를 설립해 K-민주주의의 교육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반민주적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킨 K-민주주의의 원류는 호남”이라며 “여순 10·10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K-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역사”라고 청소년 헌법교육센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직선 4기 3년의 성과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 모델을 완성하는 등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K-교육은 K-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공생의 철학을 담은

## 직무 관련 항응 받은 임기제 공무원, 2심은 “해임은 과도”

지자체 홍보영상 출연 유튜브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된 임기제 공무원이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승소했다. 항소심은 실제 받아 행진 금품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홍보 직렬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도정 홍보영상에 출연한 적 있는 유튜브 B씨로부터 123만

### 1심과 달리 2심은 실제 금품 수수액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 “친한 사이 주고받은 선물, 적극 요구 안 해... 징계재량 남용”

원 상당의 금품·항응을 수수, 청렴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1심에서 일부 96만원 상당 금품 수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정부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직무관련자는 아니다. 사교, 의례 목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금품이다. 징계 양정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은 “A씨가 담당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각종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사업에 B씨가 참여했다. A씨가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식비 결제를 요구하는 등 각종 음식·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심은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항응 등 가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해임에서 파면도 가능하고, 징계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도정 홍보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서도 금품 수수 내역 별 직무연관성을 다시 따졌다. 특히 서로 직무와 연관이 있을 기간 중

주고받은 한우세트 등 선물을 제외하고 14차례 중 9차례는 식사 또는 간식 대금으로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귀기 위한 친교의 목적이 크고 소액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B씨를 위한 생일선물 비용을 지출한 사정 등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중 직무연관성이 인정된 수수액은 총 5차례로 96만원 상당으로 봐야 한다. A씨가 능동적으로 먼저 요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재판 1심과 비슷한 취지로 수수액을 낮게 잡았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수수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 양정은 정직·해임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 원칙을 위반한 만큼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재선거 과정에서 누군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담긴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광주 광산구 한 지역농협 불특정

## 광주서 농협 조합장 후보 비방 우편물 발송... 경찰 수사

다수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A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담긴 우편물이 발송됐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후보

는 고소장에서 “9일 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최근 불특정 다수 조합원들이 자택으로 발송지를 알 수 없는 우편물이 발송됐

다”며 “우편물에는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승원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